

정청래 “李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강득구 “국민 경고 다른 해석 안돼”... 불출마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전담대외비위와 최고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선거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을 내려 놓는다”며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 대표직을 연임했던 이재명 대표로도 전준우 구성 의결 직전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

또한 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세인의 역사를 자랑할 삼아 이재명 정부가 뜻을 꺾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댐방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앞서 “국민은 연임하고 정권은 짧다”고 밝힌 친명계 반발을 샀던 그는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자도 성공한다”며 “격정하지 말고”고 다독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 정청래고 이 대통령이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저 정청래”라며 “우리는 한 팀 공동체,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격정 안 해도 된다”며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을 위해 결연하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연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담담과 민심만 보고 제 감정을 가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 보낸 경고 메시지까지 다르게 해석한 건 대표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당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국민의 경고라는데 정 대표의 승리라고 한다”고 사실상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정 대표 사퇴로 한병태 원내대표가 차기 대표가 정해질 때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조승래 사무총장과 강준원 수석대행인 등 정무직은 사임하게 됐다.

또한 전대에서 선출되는 새 민중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영민 기자 joy@siminilbo.co.kr



이정부 성과 언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해야... 법사위원장 시켜달라”

김영민 “李대도 중요하지만 檢 개혁 시급”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2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당대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을 지양부터 논의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김민석 총리께서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 당장 폐지하고도 주장하고 계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하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며 “(김 총리와 정 대표)두분 다 권력이 있지 않다.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만드는 최종책임자는 김민석 총리. 지금 만들어놓는 정부안을 국회로 바로 보내달라. 또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을 최종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시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그리고 저를 법사위원장 시켜달라. 그러면 셋이 담담하게 오늘부터 토론하고 빠르게 정리하자”며 “의원총회도 열고 필요하면 당원들에게 보도도 공표하면서 한달 이내 다 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대외까지 잘 했다는 건 가리는 질문에 ‘정당대외에 두분(김 총리·정 대표)이 출마하시면 거기에 대해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후한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안전 폐지보다는 늦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흔히들 논의하는 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법에는 공소장, 공소장은 10일에 출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7~9일 넘어가버리면 출발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안 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는 해야 한다. 개혁을 할 때 개혁의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한 번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단순히 행정부 일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과오들을 보며 이미 정지권리와 해 있다. 박삼용 검사나 장우익 검사를 보면 국민의 개혁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것들을 대해서야 과감하게 정리를 한 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대외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과제의 검찰개혁을 지금 빨리 지금부터 논의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제가 얼마 전에 시민사회와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그 게 기준을 갖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만 행 행사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현재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내 같이 상의하면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혁주 기자 dra@siminilbo.co.kr

안규백 탄핵소추 청원 15만명 돌파... 국회 “즉각 경질하라” 촉구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외교-안보 라인 쇄신”

24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15만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서면서 14만5572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수는 계속 증가해 이날 15만 명 정상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방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정쟁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서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의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배경이라며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추진, 후방 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입장을 충분히 검증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의견 엇박자도 노출됐다”며 “지난 10일에는 창원의 공병을 사던 조진 예비군 훈련 사방사건에 대한 조사규명도 군 수뇌부의 무관심으로 후지부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함미월주’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을 ‘경악스러운 일’로 규정하며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함을 탄핵해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무력화시켰다. 육·해·공

정 원내대표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만에 10년째 계속된 이번 국민 청원을 기쁨게 여기지 말고 안보 불온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행도 논평에서 “안 장관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남는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달과 국민의 합리적 직감을 듣고 임명을 강행했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국정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무장중립을 노린 듯한 인보 체제 행위였다”며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쇄해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무력화시켰다. 육·해·공

정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국군사관학교’로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과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특색있는 교육이다. 군 후방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발상 또한 ‘안보의 외주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실행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 요청을 충족했다. 상임위 회부를 위해서는 총수의 5만 명을 넘어선다.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제위에 반대하는 발도세 청원도 이미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영민 기자 yyj@siminilbo.co.kr

민중당 “원 구성 명단 제출 않으면 국회법 단독 결단”... 국민의힘 압박

“국회법 기한 넘겨 7월 반드시 일하는 국회 국회 후반기에도 발목잡기 생각조차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한병태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24일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민중당 단독으로 공식 협상만 하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옛날 국회 후반기도 발목잡기를 이어가겠다는 풍문은 생길까 조차 말라”며 “곧 시작될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7월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당의 후반기 일 구성 원칙을 확고하겠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 성과를 내

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민중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아보면 결론은 지명했다. 내란수교 운송선의 거꾸로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정책 실행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란수교 운송선과 핵무기 실험국 정 발목잡기 민생에 골든타임을 단정했다”며 “여야와 대변인 영터러 필라테스만 문제에서 어떤 변이라도”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중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교 파면과 내란 일당 실권, 민생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민중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아보면 결론은 지명했다. 내란수교 운송선의 거꾸로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정책 실행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란수교 운송선과 핵무기 실험국 정 발목잡기 민생에 골든타임을 단정했다”며 “여야와 대변인 영터러 필라테스만 문제에서 어떤 변이라도”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중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교 파면과 내란 일당 실권, 민생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민중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아보면 결론은 지명했다. 내란수교 운송선의 거꾸로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정책 실행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란수교 운송선과 핵무기 실험국 정 발목잡기 민생에 골든타임을 단정했다”며 “여야와 대변인 영터러 필라테스만 문제에서 어떤 변이라도”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중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교 파면과 내란 일당 실권, 민생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전혁주 기자 dra@siminilbo.co.kr

박수진 “선관위 개혁, 입법으로 해결”... 원포인트 개혁 부정적

6.3 지방선거 투표율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원포인트 개혁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개혁은 입법으로 풀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감사받는 선관위를 만들자. 제3자 통제, 그리고 유능한 선관위 인사를 하는 것들은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헌법상의 독립성 원칙은 3.15 부정선거에서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지휘체계는 판사하다가 부업으로 하

고, 사무처는 또 권위주의가 있고, 이걸 확실히 뜯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은 또 거대한 산악기사가 열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순차적 개혁이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기 때문에 합치 않을 것”이라며 “원포인트 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제기를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개헌위가 생겨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은 제18호를 개정해서 후보자의 지명 1년 10개월 후 총선인데 이걸 미뤄주겠는가. 개혁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선관위가 감사위원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사직적으로 제3자 검증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한테 한방기만 간 관련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으로 선거가 끝나면 전국 단위 지선, 대선, 총선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해서 확고히 고쳐나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자택에 이미 스스로 선거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 분석하는 사무관기법, 점검법을 냈다. 이번에도 비슷한 걸로 선관위도 자체 보고를 했다. 선거가 끝나면 사후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해서 국회가 지휘해달라는 건데, 수순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이 낫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yyj@siminilbo.co.kr

“청문회 인격침해 질의 제한”

최혁진, 개정안 대표발의

부소속 최혁진 의원이 24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은 의결하면 이번 개정안 ‘청문회 인격침해 질의에 대한 ‘업무 관련성 원칙’을 도입하고, 직무와 무관한 인격 침해성 질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의를 신설해 위

원의 질의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유서 제18호를 개정해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연, 성취 지향 등에 대한 무의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도록 했다. 반복적이거나 부적절한 질의가 이뤄질 경우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할 권고국회의장에게 질제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제18조의2를 신설해 비윤리적 청문 질의에 대한 재제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장은 위반 질의가 있을 경우 7주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인격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또는 질의 제재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의 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yyj@siminilbo.co.kr

중·방문 리창 총리와 회담

송홍리 “한 단계 높은 교류를”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리창 중국 국무위원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동력 강화를 내다.

한중 총리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리창 총리와 리커창 총리 회담 이후 7년ぶり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서역의 한 호텔에서 중국 관료 사절 2위인 리창 총리와 약 40분간 회담했다.

김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들의 만남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정치적 만남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 경제, 문화, 청년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도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더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회담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 선정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VIP 만남에서 리창 총리와 나란히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들의 만남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정치적 만남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 경제, 문화, 청년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도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더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회담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 선정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VIP 만남에서 리창 총리와 나란히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들의 만남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정치적 만남의 하나의 정점이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 경제, 문화, 청년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도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더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회담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 선정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VIP 만남에서 리창 총리와 나란히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들의 만남에

전혁주 기자 dra@siminilbo.co.kr